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정 3년 결산

발로 뛰는 입법활동 돋보여 일부의원 자질 문제 지적도

■광주시의회

제5대 광주시의회 3년동간의 의정활동 평가는 명암이 엇갈린다. 조례 제정 등 입법활동은 비교적 돋보였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비리 연루 등 자질부족이 지적됐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5대 의회의 입법활동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1위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총 64건으로 1명당 평균 3.3건에 달한다. 대구시의회가 3건, 대전 2.8건, 울산 2.3건, 서울 1.1건, 부산 0.5건에 비해 단연 돋보였다.

내용에서도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는 시 산하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에 주력했다. 또 '전라산업 육성',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도 앞장섰다. 의원별로는 진선거 의원(북구1)이 10건으로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명자(비례·7건), 김후진(북구2·6건), 손재홍(동구2·5건) 의원 순이었다.

하지만 활발한 의정활동 이면에는 제5대 의회는 주류-비주류로 갈려 3년내내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됐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는 의원들간 주먹다짐도 벌어졌고 전·후반기 의장에 동일인이 선출되는 결과도 빚어졌다.

여기에 일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인허가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당국에 의해 시의회가 3차례나 압수수색 당하는 등 수도모도 겪었다.

이같은 의원들의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정가에서는 공개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시의원 전원 물갈이설'이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도의회

제8대 전남도의회는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F1 코리아 그랑프리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과 감사·견제 활동은 물론 상임위와 특위·정책연구회 중심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원 1명당 평균 1건의 조례안 발의 등 저조한 입법활동과 F1 체무 보증안 등 표결 처리 방법 논란 등 단일한 의회 운영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또, 맥빠진 행정사무감사와 알맹이 없는 도정질의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만족스럽지 못해 의정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평도 따르고 있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8대 전남도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3

년 동안 ▲조례안 230건 ▲동의·승인 16건 ▲규칙 안 9건 ▲예산·결산안 33건 ▲결의안 43건 등 모두 36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척도가 되는 조례는 총 230건이 발의돼 222건이 가결됐고, 6건은 계류, 폐기와 철회된 조례는 각 1건씩이었다. 하지만, 전체 조례안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26%인 59건에 그쳤다.

그러나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미혼모 가족지원·다 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전남도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야생 동식물 보호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남도 맛 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등도 눈에 띈 조례였다. /최권일기자 cki@

정가 라운지

농축산업 현장 방문

○민주당 소속 이낙연 <사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장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승규 제1차관이 오는 4일 1박2일간 함평·영광·장성을 방문, 농축산업 현장을 둘러본다.



이 의원과 장 장관 등은 4일 영광 농협 종돈사업소(대마면), 굴비거리(법성면), 청보리 사료공장(영광읍), 칠보리 가공공장(군남면) 등을 방문한 뒤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선착장에서 열리는 '참조기 종묘 방류' 행사에 참석한다.

5일에는 함평 천지한우특구(함평읍)와 버섯농장(해보면), 장성 잔디작목반(삼서면)과 인삼재배단지(동화면)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서남권 광역화 추진"

○정종득 <사진> 목포시장은 1일 "서남권 인구 100만 광역도시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각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신선 4기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 신안, 영광, 해남 진도군 일원 1천216km를 2020년까지 2456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서남권 발전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신선 4기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 신안, 영광, 해남 진도군 일원 1천216km를 2020년까지 2456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서남권 발전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운영방식 싸고 고성

○전남도의회가 의회 운영방식을 놓고 의원들간 고성이가 등 마찰을 빚었다.

전남도의회 고송자(민노·비례) 의원은 1일 제24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회기 때 상정된 F1체무보증동의안 표결처리 당시 전자투표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결표결한 것은 의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

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질타한 뒤 "도의회 운영이 마을 주민회 의보다 못하다"며 표결 내용 공개와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자투표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민주당 윤시석 의원(장성)이 고 의원의 문제 제기에 반발하면서 고성이가 오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윤리특위장에 손재홍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재홍 의원(민주·동구2)이 선임됐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손 의원을, 간사에 이명자 의원(민주·비례)을 선출했다.

신임 윤리위원은 김후진·나중천·손재홍·양혜영·유재신·이명자·전우근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최운초 前 의장 출소

○"지난해 하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광주 북구의회 최운초(64) 전 의장이 2일 출소할 예정이어서 그의 의회 출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전 의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동료 의원들에 의해 의정직에서 해임됐고 의원직 사퇴 압력에도 시달렸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서 국정보고대회

○"한나라당은 2일 박재순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 의장, 남경필·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국정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광주시장·전남도당 위원장과 핵심 당직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 최고위원 등은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등 쟁점 법안과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대해 국민·당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박지경·최권일·박정욱기자 jwpark@ /목포=임영준기자 lyc@

추락 예멘 여객기 2명 극적 구조

153명을 태운 예멘 국영항공사 여객기가 지난날 30일 오전 인도양의 섬나라 아프리카 코모로 해상 추락해 승객 대부분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 해역에서 5살과 14살난 어린이 생존자 2명이 발견되는 등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사고 발생 후 프랑스 당국은 드골 공항에 대책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군용기 2대와 선박 등을 코모로로 급파, 코모로 당국의 수색작업을 지원했다.

구조당국은 5살짜리 어린이 생존자 1명을 사고해역에서 구조했다고 밝혔으며 코모로 적십자 대변인은 14살의 소녀가 추락 현장에서 구조돼 코모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몸이 그다지 걱정스런 상태는 아니다"고 전했다. 사고 해역에서는 시신 5구와 여객기 잔해가 발견돼 인양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와 예멘 항공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강풍으로 인한 약전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원로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측화, 공천과정의 부패현상 심화, 논란을 빚어 온 정당공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부영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과 김성훈 전 상지대 총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찬종 전 의원 등 정치·사회 원로 20여명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온갖 비리와 정치부패를 적결하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제1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당에 적극 동참하고 여야 정당은 이를 당론으로 결정할 뒤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건, 이홍구,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등 각계 원로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50여명은



김성훈(왼쪽) 전 상지대 총장이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에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나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에 동참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 등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정당 입김에 좌우되면서 진정한 자치제도의 정신은 훼손됐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측화 논란 속에 일부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정당공천제 철폐를 주장하며 탈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실

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제도권 정당이 이자제를 감시하고 장악할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featuring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English classes, and various educational cours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www.hanbitgosi.co.kr